

건강 칼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전 세계인구의 10%가 넘는 사람이 아토피 증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환자 2명 중 1명은 9세 이하의 어린이이고 4세 이하의 영·유아는 전체 환자의 32.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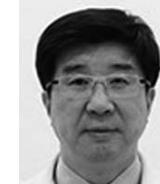
-아토피?
아토피란 알레르기원인 물질에 대해 면역물질, 특히 '면역글로불린 E'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생기기 쉬운 유전적 소인을 말한다.

그 중 아토피 피부염이란 영·유아기부터 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알레르기 습진성 피부 질환을 말한다.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원인 그리고 환아의 면역학적 이상 반응, 피부 보호 장벽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최근 들어서는 학기족화, 수입 식품의 증가, 도시 생활의 증가 그리고 생활 환경과 사용 같은 서구적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치료방법은?



오홍근

굿모닝병원 소아청소년 2과 전문의

치료는 크게 ▲회피 ▲약 ▲면역 요법으로 나뉜다.

교육을 통해 원인 유발요인에 대한 회피가 가장 중요하며 심각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증상인 경우에 서는 피부 보습, 급성기 증상 조절을 위한 항히스테린제 복용 그리고 국소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 도포의 국소요법이 있다.

목욕과 적절한 보습이 매우 중요한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는 항상 청결하고 촉촉하게 보습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목욕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목욕 후 3분 이내에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른다.

보습제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바르고 평소에도 피부에 윤기가 유지되도록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약물 요법으로는 가려움증을 치료

하기 위한 항히스테린제, 피부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등이다.

스테로이드제는 신체 부위에 따라 약물의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강도의 약제를 선택해야 하며 염증이 있는 곳에만 바른다.

-개선에 좋은 습관
의심되는 음식물이 있으면 검사를 통해 원인 항원을 밝힐 수 있으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직접 먹었을 때 증상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

특히 소아의 경우 심하게 음식물을 제한하는 경우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최근 환자 사례나 국내외 연구에서 미세먼지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해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목욕물은 미지근한 것이 좋다.
너무 뜨거우면 가려워질 수 있고 때를 밀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더 가렵게 되고 건조해질 수 있다.

새로 산 옷은 입기 전에 빨아서 입고, 모직이나 화학섬유보다는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가려워서 긁으면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깎는다.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계절한 운동은 피하며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금하는 게 좋다.

미세먼지, 황사가 극성을 부리는 5월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황사는 산성 성분이 포함돼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켜 가려움·itching·발진·발열·부종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미세먼지 역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므로 아토피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유의해야 한다.

최근 환자 사례나 국내외 연구에서 미세먼지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해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독자제언

권력부패 막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부패 정황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검사장 구속과 함께 재벌 그룹 비리 파문, 청와대 관련 인사의 뒤 봐주기 논란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경찰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의 우리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은 아주 막강하다. 수사권 수사자 위원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고 기소권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 재량 또한 크다고 하겠다.

영미법계인 영국이나 미국은 수사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행하고 검사는 공소만 담당하고 있으며,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와 종결권도 일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사례들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질부족 또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사건이 경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 경찰의 자질 부족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자질 문제로 볼 시안은 아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기된 경찰자질 부족으로 인한 수사권과 종결권 미부여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설득력이 없다.

총불민심이 세운 새 정부는 경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차례 제기되어온 경찰과 경찰 간 수사권 문제는 양조조의 상호 견제하며 보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부재원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순경

독자제언

사륜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

최근 농촌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수단이나 농사일을 손쉽게 하기 위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구입해 운행하거나 짚은총이 레저용으로 이용 사륜오토바이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 인식부족으로 사용신고나 운전면허도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따라서 사륜 오토바이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안전 운행해야 한다.

첫째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용신고를 한 후 배기량이 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125cc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둘째 사륜오토바이는 도로 운행시 음주·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사륜오토바이는 이전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약해 상대차량이 식별하기 어렵고 충돌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이전에 보도나 차도를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역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시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판다보수, 교통법규 준수의식 결여 등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 면허취득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올바른 법규 준수로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박규선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의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힘내야 한다

의산시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다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말 사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풀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6대기업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전북발전 협안 사업들 중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의산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 의산식품 클러스터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그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더디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능동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발전의지를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 의산식품 클러스터는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의산시는 물론이고 전북지역은 그만큼 발전할 게 틀림 없다. 의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 모습을 드러내면 도내 농가들을 에게도 꼭꼭할 만한 경제적 실익을 줄 터이다. 또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게 언제쯤 현실화 될지 알 수가 없다.

의산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이

전북도 예산 7조원 시대 열어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이 7조원이 넘도록 해야 한다. 신규 사업 추진에도 힘내야겠다는 주문이다. 예산에도 반복해 말했듯이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느라면 지역 발전은 거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전된 모습은 경쟁의 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예산 7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런 기대 위에서 전북도의 신규사업 벌금이 관심의 대상이다. 저번에 2018년과 2019년을 미리 내다보고 지역 발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운 게 보기 좋았던 것이다. 그때 전북도가 총 370건 6천690억 원 규모의 일거리를 찾은 것은 도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사진이기에 전북도는 어떻게 하면 징부 부처를 살피면서 예산 증액을 설득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을 철저히 해둬야 한다는 당부이다. 그 렇지 않고서는 전북도의 신규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가 없다. 거듭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신규 사업 추진에도 힘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위성을 설득해야만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신규 사업들이 매번 큰 도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오래이기에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낙후돼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신규사업을 설득하면 힘차게 뛰어야 한다. 힘차게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저자세를 보이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진취적인 자세가 있어야 끝까지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민금 사업 말고는 다른 고민고민한 계 지역의 현실이다. 국책사업이라지만 탄소산업의 현주소를 보면 신규사업 수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면 전북도는 가일층 힘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 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